

대만 선거 이후 양안 위기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Online Series

2024. 1. 15. | CO 24-07

이 우 태(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황 태 연(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친미·독립성향의 라이칭더 당선

지난 1월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와 대만민중당(이하 민중당)의 커윈저(柯文哲)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간 첨예한 힘겨루기 와중에 치러져 ‘미중 대리전’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라이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구촌 첫 대선에서 대만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라며 “중화민국(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대만 독립 일꾼’이라고 자처하던 라이 당선인은 “중화민국의 헌정체제에 따라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대등과 존엄이라는 전제 아래 봉쇄를 교류로 대신하고 대화를 대화로 바꾸겠다”라고 밝혀, 당장은 무리하게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않겠지만 중국의 압박과 대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라이 당선인의 유화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향후 민진당 정부가 반중·친미 기조를 견지할 것인 만큼 중국의 대(對)대만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구도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선거 이후 미국의 ‘양면전략’

그렇다면 미국은 대만 선거 이후 어떠한 정책적 선택을 할까? 그동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대만의 고위관료들이 상호 방문하고 대만에 8,000만 달러(한화 약 1,060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왔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현상유지’ 기조를 바탕으로 당분간 공식적인 입장과 실질적인 정책을 달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13일 대만 선거결과에 대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부 장관은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둔 미국인들과 대만인들의 동반자 관계는 심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대만은 공통의 이해와 가치를 기반해 공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혀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미 성향의 민진당 정부의 재집권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정세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한 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장기화 조짐이 나타난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은 1월 12일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쟁의 전장이 중동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며 전 세계에 ‘팍스 아메리카나’를 재확인하려는 자신감을 표했지만, 두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장기화와 전장의 확대는 미국에 정치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독립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라이칭더의 등장은 한편으로 미국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이 당선인이 향후 대만 독립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경우 중국을 자극하여 대만해협의 갈등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미국은 두 개의 전쟁에서 세 개의 전쟁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은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민진당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대만의 독립 주장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며 투-트랙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및 양안 정책의 변수는 다가올 11월 미국 대선이다. 1월 15일부터 시작될 경선에서 대중 강경책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유력해지고 선거 기간 중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심화할 경우 외교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현상유지 정책 기조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재보다 중국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 수위는 최고조로 높아질 것이다.

대만 선거 이후 중국과 대만의 ‘살바싸움’

그동안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보다 강경한 대만 독립주의자인 라이 당선자에 대하여 원색적인 비난을 해오며, 대만 총통선거일까지도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중국의 대만 관련 업무 담당 기구인 국무원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은 선거 결과에 대해 “민진당이 주류 민의를 대표할 수 없고,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이번 선거가 양안관계의 기본 구조와 발전방식을 바꿀 수 없으며…통일의 대세를 막을 수도 없고”, 중국의 원칙은 ‘92 공식’ 견지와 ‘대만독립’ 반대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어 경쌍(耿爽)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선거결과에 대한 각국의 축하 인사와 관련해 “대만(台灣地區)선거는 중국의 일개 지방의 일로 관련 국가들의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며, 중국은 강력하게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라고 밝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경하게 대변하였다. 이러한 중국은 향후 민진당 정부에 대한 전반적이고 복합적인 압박 정책 강화를 바탕으로 대만의 친중세력과 민간에 대해서는 회유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 그동안 대만해협 중간선 부근에서 이뤄진 군사 활동은 정례화, 상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찰풍선 등 다양한 정찰 활동이 빈번해지고,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기반한 군사훈련이 좀 더 세밀화, 전문화되어 해상봉쇄작전을 비롯한 육해공 합동 상륙작전이라는 대규모전을 가장한 훈련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미사일 및 전자전 훈련 등 전방위적이고 단계적 가상훈련 방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면서 경제교류와 관련해 갈라진 대만 여론을 더욱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월 1일 자로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인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관련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감세 조치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농수산물, 기계, 자동차 부품, 섬유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한 바와 같이 경제적 압박은 강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라이 당선자가 참여 여부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던 중국이 주도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며 압박과 회유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군사·경제적 압박 속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레드라인을 미국과 대만으로부터 방어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만 독립 여론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과의 경제사회 및 문화관광 교류 방안을 제시하며 회유 및 유화정책을 통해 대만 내 친중세력과 민간에 대한 통일전선전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라이 당선자는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정치·군사관계 강화 및 국제 민주주의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의존을 벗어나기 위한



탈중국화 대안을 모색하며 중국의 강화되는 통일전선전술에 대해서도 대비하려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입법원선거(의회선거) 결과 입법위원 113명 중 민진당은 51석(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을 차지하며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향후 국정운영 및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치적,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은 민중당의 부상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라이 당선자가 주미 타이베이경제 문화대표처 대표인 샤오메이친(蕭美琴)을 부총통 후보로 결정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한 것이지만, 당분간 급격한 대만독립 추진보다는 안정적으로 대내외 여론을 살피며 중국과의 관계 정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안관계는 상호 강 대 강이라는 극단적 선택이 몰고 올 파경을 배제하면서 중국과 대만 모두 국내외 정세를 고려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적, 전략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살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선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의 대응

친미·독립성향 라이칭더의 당선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양안 간 긴장 고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또는 전쟁 가능성의 증가는 우리에게는 군사적·경제적으로 새로운 위기 상황의 도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군사적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만약 대만해협의 군사적 위기 발생 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해야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자유로운 항해’의 보장을 이유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2023년 1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주일 미 공군의 차출을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심각한 안보 공백 및 위기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당장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양안관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틈을 이용해 북한이 정세를 오판하여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이 공세적으로 군사 활동을 하도록 용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대만해협 문제 대응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 한·미·일 간 안보협력 체제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90% 이상은 말라카해협을 거쳐



대만 동부 해역을 통해 들어오고, 전체 해상 운송량의 약 33% 정도가 대만해협 또는 그 인근을 통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 산하의 이코노믹스의 발표에 따르면, 대만해협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GDP가 23.3% 감소하며 당사국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적 타격이 큰 국가가 된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발표에서도 한국은 대만해협 충돌 시 경제적 위험이 가장 큰 국가 중 두 번째로 꼽혔다. 이처럼 대만해협 위기에 따른 지정학적 문제는 유럽 및 중동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해상운송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해상운송로에 위치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해상운송로의 영향을 함께 받는 일본과 대만해협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해상운송 우회로 확보 협의를 위한 가칭 ‘한일 공동 해상운송로 협의회’ 등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요 수출 입기업 및 물류·운송기업 등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가칭 ‘민관 해상운송위기 대응 TF’를 설치하여 대만해협 위기 발생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외교력을 동원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모두 군사적 위기 또는 전쟁을 선택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상호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위태로운 갈등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바 우리도 이에 따른 외교적 대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대만을 포함한 소위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의 협력 증진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외교적 마찰과 중국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친미·독립성향 라이칭더의 당선은 양안관계 악화와 대만해협 위기라는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대만, 국제사회 모두 최악의 상황을 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 변화는 대만해협의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 특히, 갈등과 불안에 노출된 한반도는 대만해협의 위기 발생 시 정치·경제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선제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 상황에 맞게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노력 및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와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